

I. 정책실명제 개요

□ 개 요

- (의의)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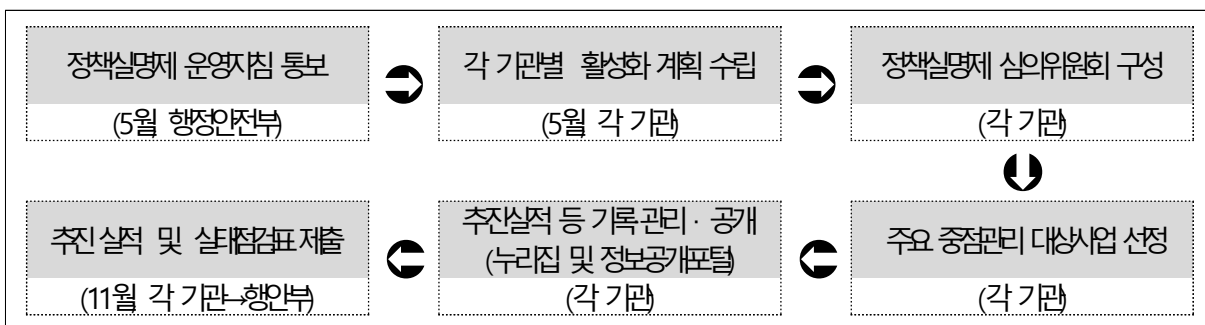
-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 계획서, 보고서, 회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도자료에도 담당자를 적시하여 책임성 제고

- (추진경과)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개정)

- ▶ '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도입, 정책실명제를 전자적으로 관리
- ▶ '13년 정책실명제 주요 사업 선정,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18년 정책실명제 강화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실명제 개선방안 마련·시행
- ▶ '22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개정, 기관별 운영 과정상 문제 보완·개선
- * 기관별 대상 사업 확대,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 추진 실적현황 추가 등

-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시·기초), 시도 교육청

- (운영절차) 매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안부)'에 따라 각 기관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 정보공개포털 통합공개



- (대상사업 선정) 국정과제와 국민이 신청한 사업 및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주요 법령 제·개정 사항 등

- (공개내용)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기안자·검토자·결재자 실명 및 공개문서 원문

Ⅱ.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영 제63조의3제1항5호)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1.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기간) 수시(단, 조례 등에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 조례 기준)
-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작성, 제출
 - ※ 기관 누리집 문서24, 담당공무원 이메일 방문우편 온국민소통 등 접수 병행
- (신청 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해당(소관)기관 사업
- (선정 및 공개) 다른 중점관리 대상사업들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수시로 접수받은 신청서는 수시로 심의 가능(서면심사도 가능)
- (심의소위원회 운영) 수시로 접수 받은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심의소위원회는 심의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2명 등 4명 이상으로 구성, 합의제를 원칙으로 운영
 - 국민이 신청한 사업은 수시로 접수받아 대면·서면심의 수시로 개최 가능

2.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공고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	○ 각 기관 홈페이지, 문서24, 온국민소통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온국민소통 관리자 계정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처리	○ 신청일로부터 <u>가급적 10일 이내</u>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소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제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 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 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